

金 仁 植 議員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김 인 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1세기를 대표할 명품·창조도시, 푸른대전 건설에 굵은 땀방울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 성 호 시장님 !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 신 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오늘 2007년 정해년(丁亥年)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올해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반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면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키워 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우리 어른들 모두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부족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때문이라는 변명 하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아갈 미래의 성장동력 자원이자, 지식기반사회의 대전광역시를 이끌어 나아갈 주역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광역시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마음껏 먹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대전광역시는 일찍이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3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전국 11개 자치단체 중 열 번째로 적은 5억원만을 책정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표 1>

<표 1> 시·도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2006년도 지원액			2007년도 지원액		
	계	시 도	시 군 구	계	시 도	시 군 구
부 산	604	200	404	1,210	450	760
대 구	-	-	-	320	160	160
인 천	2,400	1,200	1,200	3,600	1,800	1,800
광 주	-	-	-	966	483	483
대 전	-	-	-	500	500	-
울 산	6,700	3,350	3,350	672	336	336
강 원	-	-	-	670	200	470
충 남	11,900	3,500	8,400	12,000	3,500	8,500
전 남	9,000	2,700	6,300	29,100	3,700	25,400
경 북	-	-	-	9,300	7,300	2,000
제 주	2,000	1,000	1,000	3,500	3,000	500

자료: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2007년).

현재 대전광역시보다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아직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뿐입니다.

이는 곧, 대전광역시의 열악한 급식지원비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타시·도 학생들보다 질이 낮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를 확대·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가 책정한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5억원은 35개 시범학교만을 대상으로 1인/1식당 약 2백원 범위 내에서 우수품질의 식품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으로, 연간 학생 1인당 3만 6천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에는 연간 35억원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비를 책정하고 있어 천안시 학생 대부분이 1등급의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반면,

우리 대전의 학생들은 열악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인해 이보다 질 낮은 2등급, 3등급의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일부 시범학교에서만 그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 열악한 학교급식지원 현황을 볼 때, 과연 대전광역시가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우수식품 구입비를 적극 확대·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수와 경제적 차이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급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7년 현재 대전광역시 5억원의 우수농산물 지원비를 5개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1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수와 지역의 경제적 형편 및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정책집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단가는 각 학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생활형편이 나은 지역의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충분히 책정하여 비교적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학생이 적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급식비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질적으로 낮은 급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젠 지역간 교육격차를 넘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시 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하는 지원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생이 많거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들을 추천받아 지원품목 및 지원액 규모 등을 심의하여 지역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효과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지원비의 대전광역시 분담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로 22억 3천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전광역시는 11억 1천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각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운용상태를 감안할 때,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를 어떻게 분담하려 할지 의문시 됩니다.

<표 2> 2008년도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분담비율

(단위 : 명/백만원)

구 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학생수	61,976	8,038	9,657	21,995	12,610	9,676
지원금액	2,232	290	348	792	454	348

참고: 지원금액은 시(50%)와 자치구(50%)의 분담금액을 합한 금액

<표 3>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구 분	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재정 자립도	69.7%	17.7%	23.0%	28.9%	39.7%	20.7%

일부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대전광역시도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를 50%씩 분담시킬 경우, 급식지원 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식품지원비의 대전광역시 분담비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50 : 50의 분담비율보다 상향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인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또는 인근 시·군으로부터 우수농산물을 싼 값에 구입하여 관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전광역시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분담비율 상향조정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계적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2004년 3월 제정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학교급식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전광역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교급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시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시장 소속 하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및 기타 현행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7년 3월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행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급식지원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동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아직까지도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조례시행을 늦추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헌법」 제31조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교육기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는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실제로 전북지역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가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고, 전북 장수지역의 학부모들은 2007년 3/4분기 학교운영지원비를 지난 9월에 반환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부족한 교육재정과 학교예산 타령에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대해서도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약 683억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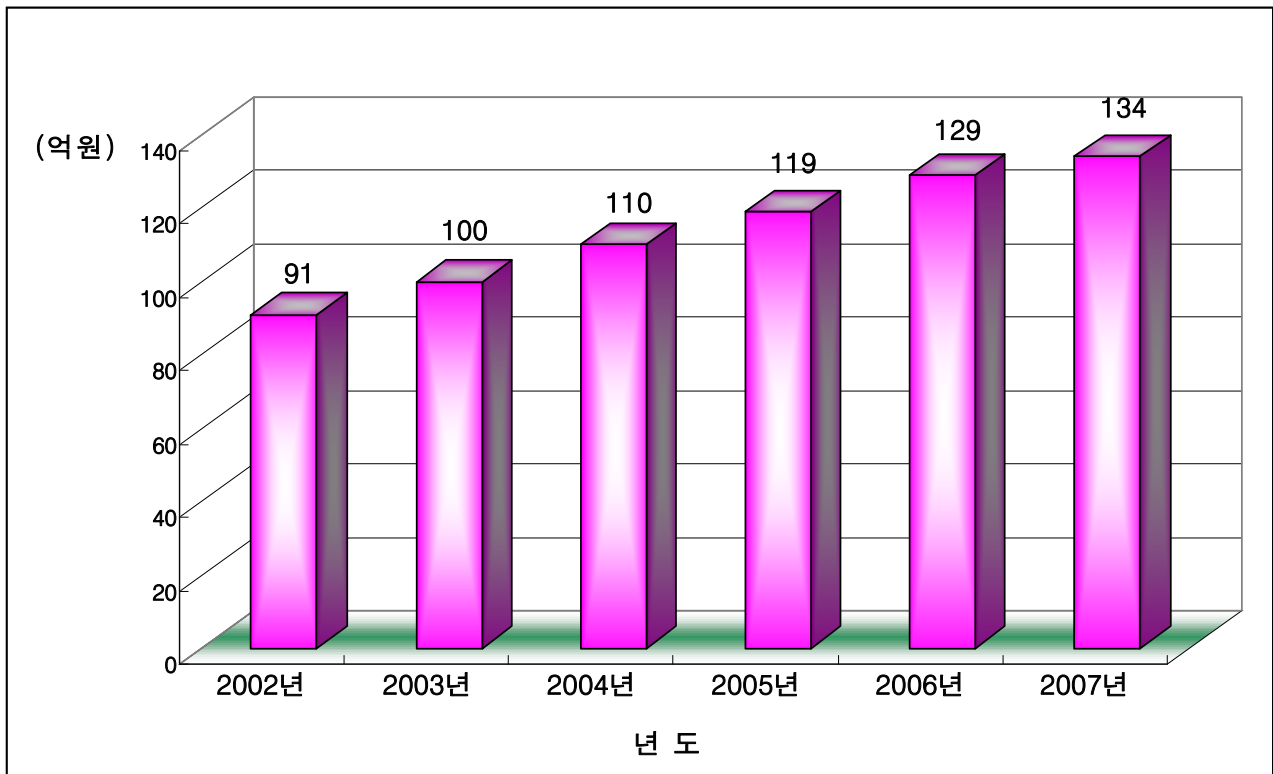
2007년도에만 약 134억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였으며, 이러한 징수금액은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10억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생 1인당 중학교 평균 학교운영지원비는 2002년에 16만 7천원(분기별 4만 2천원)이었던 것이 매년 3.78%씩 증가하여 2007년 올해에는 학생 1인당 20만 5천원(분기별 5만 1천원)씩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4, 5>

<표 4>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현황

(단위: 천원)

학 년 도	구 분	본 예 산 액		
		계	사 립	공 립
2002학년도	계	9,101,254	1,592,676	7,508,578
	동부교육청	4,164,975	1,209,713	2,955,262
	서부교육청	4,936,279	382,963	4,553,316
2003학년도	계	9,953,730	1,514,989	8,438,741
	동부교육청	4,495,374	1,234,422	3,260,952
	서부교육청	5,458,356	280,567	5,177,789
2004학년도	계	11,005,877	1,610,951	9,394,926
	동부교육청	4,865,188	1,241,045	3,624,143
	서부교육청	6,140,689	369,906	5,770,783
2005학년도	계	11,906,423	1,693,335	10,213,088
	동부교육청	5,211,527	1,309,707	3,901,820
	서부교육청	6,694,896	383,628	6,311,268
2006학년도	계	12,851,346	1,764,064	11,087,282
	동부교육청	5,504,707	1,356,334	4,148,373
	서부교육청	7,346,639	407,730	6,938,909
2007학년도	계	13,413,072	1,651,516	11,761,556
	동부교육청	5,438,984	1,242,547	4,196,437
	서부교육청	7,974,088	408,969	7,565,119



<표 5> 중학교 학생 1인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

(단위 : 원)

연 도	연 액	분 기 액
2002학년도	166,800	41,700
2003학년도	175,200	43,800
2004학년도	187,200	46,800
2005학년도	192,840	48,210
2006학년도	198,600	49,650
2007학년도	204,600	51,150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최소한도의 교육비를 부담해 온 것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실정, 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지역별 교장단협의회에서 징수금액이 결정되고,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직원 인건비, 학교 회계직원 인건비, 기타 교수학습활동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어 그 사용용도에 문제가 있으며, 징수금액이 지역 교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라기보다는 강제징수 성격이 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상교육차원에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작정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경우, 대전광역시 중학교 전체 세입예산의 12.4%에 해당하는 130여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며, 그에 따른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는 국가가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형태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국가 또는 지방교육청의 재원마련 방안들이 마련된 이후에 연차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요구와 건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법률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 중앙정부에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교육행정을 펼치기보다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지닌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개선요구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기울여 중학교의 무상교육 실현을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율적인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방식이 지역별 교장단협의회에서 징수금액이 결정되고,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는 관행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심의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역의 인적자원이 지역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어른들 모두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깨닫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